고위급 군사대화 재개 합의… "가장 생산적·건설적 논의"

美中 정상회담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시 주석은 "서로 등 돌리는 건 옵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파이롤리 에스테이트 내 정원을 걸으며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샌마테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군(軍) 고위급 대화에 다시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재차 내비쳤다. 한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한 부분은 논란거리가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4시간여의 회담 직후 열린 단독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미·중 간 회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했던 것 중 가장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시 주석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는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기자회견은 시 주석의 참석 없이 바이든 대통령 단독으로 진행됐다.

회담에서는 고위급 군사 대화 재개가 합의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대화 재개를 촉구해 왔으나, 중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탓하며 미국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절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 대화가 중단됐던 상황은 염려스러웠고 오해·사고 등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군 대 군 소통 재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직접적이고 개방적이며 명확한 대화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정책조정협의 등 다시 열기로
한반도 완전한비핵화 약속 재확인

대만 문제 관련 미중 입장차 여전
바이든 '시진핑, 독재자' 발언 논란

백악관 설명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회담을 계기로 미·중 방위정책조정협의 및 미·중 해상군사협의 관련 회의도 다시 여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고위급 간부 간 전화통화도 재개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백악관은 "(회담에서) 대통령은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를 비롯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평화·안정 유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차가 여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양국 간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대만의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 주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또 향후 몇 년간은 대만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시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양안(중국과 대만)의 차이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담에서는 미국 내 사회문제로 대두된 펜타닐 관련 합의도 이뤄졌다. 양국 정상은 펜타닐을 비롯한 합성 마약을 포함한 국제 불법 마약 제조와 밀매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이 독재자인지를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독재자) 맞지 않나"라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정부 형태를 기반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독재자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한 적이 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공개적인 정치 도발"이라며 미국을 비난한 바 있다.

한편 백악관은 두 정상이 정부 대화를 통해 첨단 인공지능(AI)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응하고 AI 안전을 증진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AI 및 반도체 부문 투자를 제한해 왔다.

회담에서 시 주석은 미국이 안보라는 미명하에 시행한 수출통제 및 투자제한 등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세계경제 성장위해 '연결성' 가속화해야"

尹 'APEC CEO 서밋' 기조연설
"공급망 리스크, 아태국가에 위협
선제적·체계적 대응 함께 고민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APEC이 중심이 돼 세계 경제의 '연결성(connectivity)'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APEC 내 ▲교역·투자·공급망 연결성 강화 ▲디지털 상호 연결성 강화 ▲미래세대 간 교류 확대 등 3가지 해법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 부대 행사로, 의장국인 미국의 경제단체가 주관하는 비즈니스포럼이다. 이번 APEC CEO 서밋에는 글로벌 재계 리더와 석학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세계 경제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연결의 힘은 약화되고 곳곳에서 분절의 힘이 세력을 얻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심화 돼가는 기술패권주의와 자원 무기화는 세계 경제의 블록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팬데믹을 계기로 부각된 공급망 리스크는 특히 자유무역을 통해 발전해 온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에게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연결과 이를 통한 가치 창출은 아직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역·투자·공급망 연결성 강화와 관련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과 위상은 계속 확대돼야 한다"며 "특히, 공급망 리스크는 국가 차원에서는 안보의 문제이고, 기업 차원에서는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역내 공급망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보다 선제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대응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APEC 회원국과 역내 기업들이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APEC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과거 위기에서 축적한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협력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상호 연결성 강화에 대해서는 "세계는 지금 산업혁명과 정보화혁명을 지나 디지털 심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디지털 심화 시대는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이라며 "국가를 넘나들며 데이터가 막힘없이 연결되어야 하고 국가 간에 디지털 격차도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며 "UN과 함께 APEC은 이러한 디지털 규범을 논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플랫폼"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아태 경제가 현재를 넘어 미래에도 연결성을 유지하려면 청년들의 활발한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APEC 내 미래세대 간 교류 확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한일 간 청년교류 프로그램, ABTC(APEC기업인여행카드) 등 우리 정부의 APEC 역내 인적교류 사업을 언급하며 "한국은 ABTC의 성공적 경험을 토대로 역내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은행권 안정화·신뢰회복 최우선 과제

차기 은행연합회장 조용병 내정
"은행산업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

국내 은행권을 대표해 정부와 소통해야 할 차기 은행연합회장에 조용병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내정됐다. 조용병 내정자는 정부와 금융당국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권을 안정화 시키고, 고객들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제3차 회의 및 이사회를 열고 차기 은행연합회장 최종 후보로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사원총회에 단독 추천했다.

회추위에서는 롱리스트(잠정 후보군)로 꼽힌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조용병 차기 회장에 대해 "금융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탁월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은행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은행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차기 회장 롱리스트에는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 ▲손병환 전 NH금융지주 회장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이 이름을 올렸다. 윤종규 KB금융 회장도 포함됐으나 고사 의사를 전달하면서 최종 5명의 후보가 경합했다.

이사회는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을 제15대 은행연합회장 후보로 선정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27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사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용병 내정자가 취임 후 풀어나가야 될 과제는 산더미다.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자리다. 최근 은행권을 향한 비판 여론이 높은 만큼 그 역할이 커진 상황이다. 현재 은행권은 정부로부터 '은행 종노릇', '돈잔치', '상생금융' 등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금융지주가 먼저 상생금융 계획을 밝혔지만 내용이 부족하단 질타를 받았고,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 간 담회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은행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사실상 횡재세 추진은 힘들지만 은행권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가 남아 있다.

은행권과 정부 간 긴장도가 높아지며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1957년생인 조 내정자는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1984년 신한은행에 입행해 인사·기획부장과 뉴욕 지점장, 글로벌사업그룹 전무, 영업추진그룹 부행장 등을 거쳤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신한은행장을 역임한 뒤 신한금융 회장에 올랐고 지난해 12월 용퇴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